

지방의회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어려워진다

행안부 '국외 출장 규칙 표준' 권고 비용지출 제한·출장정보 공개 확대 심사위 출장결과 적법·적정성 심의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날 경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관, 직

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와 적법·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행정정보통합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 국외 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심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또 국외 출장 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한다.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국외 출장 규칙 개정은 국민위원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따른 '세금 낭비' 지적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항공 운임료에 대한 내용 2건으로 316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주류, 커피, 맥스커피, 육포 등 76만원 상당의 간식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는 출장 예산으로 화투, 포커, 트럼프 등 사행성 도박 물품까지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교육·홍보 등도 함께 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시의회,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촉구

경제·의료 지원, 피해자 치유 공간 마련, 지역 경제 회복 등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국민의힘)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을 만나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유가족 다수가 이용하기 쉬운 광주에 피해자 등의 치유 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위에서 현장 조사, 국토교통부 보고를 종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특별법에 유가족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도 행안위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가수로 활동한 김재원 의원과 추모 음악회에 대해 협의했다.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참사 피해자 치유를 위한 공간 마련,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을 계획이다.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해 성년까지 지원하는 내용과 유가족 등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1일 양부남(서구)·안도걸(동남)·조인철(서구)·정준호(북구)·박근택(광산)·민형배(광산)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참사 유가족부터 광주시민까지 모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단도 이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는 국내 여객기 사고 중 최대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유가족·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참사 공식 예도 기간이 지났고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 품으로 돌아와 장례 절차가 끝났다"며 "유가족과 피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 영장 집행 협조하라"

방해시 민·형사상 책임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12일)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반은 지 일주일일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가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특히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위법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체포영장 집행 움직임이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측면이 있어 보인다.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입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이들을 갈라놓는 분리 시도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

정보위 보고...비핵화 불가능 판단엔 핵동결 스톱딜 나설수도

국정정보원은 13일 노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관계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스스로 과거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제1기(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총성파"인 리처드 그레넬을 특임대사로, '협상론자'인 알렉스 윙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톱 딜' 형태도 가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미 정책 동향에 관해서는 "작년 말 개최한 8기 11차 당 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상 최섉희, 국방상 노광철, 총참모장 리영길을 당 정치국 위원회에 승진·보임하는 등 러북 관계 공고화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여정은 직책 변동은 없지만 대미·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의 복심 역할을 수행 중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